

주간 통일정세

2016-44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0.29	北 김정은 잇단 '민생행보'...이번엔 비누공장 방문(연합뉴스)
	10.30	北 김정은, 직총 7차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연합뉴스)
		어디로 갔나...北 리설주, 7개월째 공개활동 안해(연합뉴스)
	11.1	北 리수용, 美 중심 제국주의 세력 저지가 중대 과제(연합뉴스)
		北 리수용, 인도네시아 방문 무산...우방 관계 균열 가능성(연합뉴스)
	11.3	北 노동신문 창간 71주년...주체적 출판보도 사상 고수(연합뉴스)
		北, 주영 대사에 최일 임명...태영호 망명에 현학봉 문책한 듯(연합뉴스)
	11.4	北, 평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보조청사 건설 중(연합뉴스)
김정은, 특수작전 대대 시찰...전투원들 잘 먹여야(연합뉴스) 英매체 "현학봉 前주영대사, 태영호 망명후 수용소행 가능성"(연합뉴스)		
경제	10.30	북한에 퍼진 시장경제...소비·투자의 28% 추정(연합뉴스)
	11.1	中 북한산 석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 성은 산둥(연합뉴스)
		대북제재 여파로 中단둥 북한식당 송도원·옥류관 폐업(연합뉴스)
	11.2	北, 몽골 광산에 노동력 수출 타진(연합뉴스)
		中지방도시, 北석탄에 잇단 '퇴짜'...통관검사 강화한 듯(연합뉴스)
	11.3	北, 9월에 중국서 쌀 대거 수입...김정은 집권후 최대(연합뉴스)
11.4	북한 옥수수 가격 대폭 상승...주민 고통 가중(연합뉴스)	
사회 문화	10.30	북한서 미신 만연...돈 조각상·신수풀이 사진 나돌아(연합뉴스)
	11.2	北 지방서 특권계급 뜻하는 '1번동지' 호칭 등장(연합뉴스)
	11.3	북한 사람들, 사석에서는 정권 비판 한다(연합뉴스)
		나선특구 중국공장서 北업자들 물건 빼돌리기 성행(연합뉴스)
	11.4	대북매체, 北 일부 가정서 노인들에 극단적 선택 요구(연합뉴스)
외교 국방	10.29	유엔 1위원회, 核결의안에 '北 5차핵실험 규탄' 포함(연합뉴스)
	10.30	中, 北라선의 홍콩계 두만강은행 폐쇄...대북편법송금 관여한듯(연합뉴스)
		북중, 완공후 미활용 국경다리 2개...개통 논의했을 가능성(연합뉴스)
		갈루치, 현 상태라면 2020년 北핵무기 100개...북미대화 제언(연합뉴스)
	10.31	빌 클린턴, 2009년 방북때 북미대화-6자회담 병행 제언(연합뉴스) 아사히 "北日, 마카오서 접촉한 듯...다렌 접촉 한달만에"(연합뉴스)

	北, 연일 반기문 총장 '협담'...美와 극우보수 비위 맞춰(연합뉴스)
11.1	美 해상기반 X-밴드레이더, 한달간 北 감시후 하와이 복귀(연합뉴스)
	푸틴, 북한과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 지시...사법 공조 일환(연합뉴스)
	러, 불법 조업 단속관에 폭력 행사한 北선원 6명 구속수사 중(연합뉴스)
	EU·일본,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제출(미국의소리)
	北, 최순실 파문 터지자 연일 '반기문 때리기'(연합뉴스)
11.2	美정보당국, 北 대선·이취임식 전후 DMZ 등 국지도발 가능성(연합뉴스)
	北, 美블링컨 북핵 비판에 "오바마 패거리, 참견 말라"(연합뉴스)
	中 한국행 유커 줄이고 북한관광 유도...접경 관광상품 개발(연합뉴스)
	북한 1~3일 이내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연합뉴스)
11.3	NHK "中, 유엔추가제재에 민생관련포함 신중입장 北에 전달"(연합뉴스)
	中, 北 나선특구에 전력 공급할 듯...송전탑 건설 한창(연합뉴스)
	러 장관, 유엔 제재에도 대북 전력공급 사업 계속 추진(연합뉴스)
	러,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 北주민에 타격 꺾선 안돼(연합뉴스)
	유엔총회 제3위원회, 15일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연합뉴스)
	메르켈,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이웃국 위협(연합뉴스)
	'석탄'에 막힌 5차 북핵실험 제재...4차례의 '57일' 초과 확실(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0. 29.

■ 北 김정은 잇단 '민생행보'...이번엔 비누공장 방문(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룡악산비누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김정은은 비누공장 방문에 앞서 최근 한 달 동안 의료기 제작 공장과 삼물 공장, 기념품 공장, 안과종합병원을 찾는 등 민생을 챙기는데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이날 현지시찰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김용수 당 중앙위 부장,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 부상, 조용원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수행함.

2016. 10. 30.

■ 北 김정은, 직총 7차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 제7차 대회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은 채 최룡해·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영길 직총 중앙위원장 등도 함께 촬영에 나섰다고 전함.
- 북한 노동당의 외곽 단체인 직총은 노동당원이 아닌 주민 중에서 다른 근로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30세 이상 노동자와 기술자, 사무원이 가입 대상임.

2016. 11. 4.

■ 김정은, 특수작전 대대 시찰...전투원들 잘 먹어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를 시찰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하시였다”고 보도함.
- 김정은은 “전투원들은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면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을 만장약한(가득 채운) 사상과 신념의 강자, 불사조들로 역세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은의 이번 시찰은 지난 9월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한 지 두 달 만에 군사 관련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 자리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명수 총참모장 등이 동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0. 30.

■ 어디로 갔나..北 리설주, 7개월째 공개활동 안해(연합뉴스)

-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27)가 7개월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음.
- 30일 북한매체 보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리설주는 지난 3월 28일(보도시점 기준) 남편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따라 평양 보통강변에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을 방문한 이후 10월 말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
-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두 달에 한 번꼴로 공개활동에 참여한 리설주가 올해 7개월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은 특이하다”면서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공식 스케줄을 담당할 여동생 김여정의 견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분석함. 일각에서는 ‘임신설’ ‘김정은과의 불화설’ 등을 제기함.

■ 北 리수용, 美 중심 제국주의 세력 저지가 중대 과제(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개막한 제18차 세계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에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0일 보도함.
- 리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침략과 내정간섭,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함으로써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오늘 공산당 노동당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함.
- 그는 이어 “이번 회의가 현시기 자주역량과 지배주의 세력 사이의 대결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데 대처하여 공산당·노동당들이 올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단결과 연대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함.

2016. 11. 1.

■ **北 리수용, 인도네시아 방문 무산…우방 관계 균열 가능성(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중단하고 갑작스레 귀국한 것으로 확인됨.
- 1일 인도네시아 정관계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애초 전날 저녁 베트남에서 홍콩을 경유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이를 취소하고 중국으로 가 귀국길에 올랐음.
- 리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방 명목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PDI-P 측이 끝까지 면담 성사 여부를 확실하지 않자 방문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짐.

2016. 11. 3.

■ **北, 주영 대사에 최일 임명…태영호 망명에 현학봉 문책한 듯(연합뉴스)**

- 북한이 현학봉 주 영국 대사를 경질하고 후임으로 최일 외무성 국장을 임명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영국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최일이 임명되었다”고 짚막하게 보도함.
- 최 신임 대사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참서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미국통으로 알려짐.

2016. 11. 4.

■ **꽃매체 “현학봉 前주영대사, 태영호 망명후 수용소행 가능성”(연합뉴스)**

- 지난 7월 태영호 주(駐)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망명 당시 대사관 수장이었던 현학봉 전 대사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수 있다고 영국 매체가 영국 내 탈북자들을 인용해 보도함.
-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3일(현지시간) 현 전 대사가 태영호의 한국행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 중 하나로 끌려갔을 것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관측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전날 런던의 북한 대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은 한 관리가 현 전 대사가 “연결이 불가능하다”(unavailable)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1. 3.

■ 北, 평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보조청사 건설 중(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시내에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보조청사로 쓸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가 보도함.
- NK뉴스는 2일(현지시각) 기사에서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익명의 인사가 찍은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힘.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외교·입법 분야 인력이 이 건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조청사인 만큼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같은 최고위 인물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이 매체에 말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1. 1.

■ 北 노동신문 창간 71주년...주체적 출판보도 사상 고수(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창간 71주년을 맞아 '주체적 출판보도 사상'을 고수하자고 선전함.
- 신문은 이날 2면 기사에서 "돌이켜보면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자, 언론인들처럼 대대로 걸출한 스승, 위대한 아버지의 손길에 떠받들려 살며 일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이어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앞으로도 역사의 증견자(증언자),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로 부르는 믿음직한 기수, 나팔수로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위대한 당과 영원히 운명도 미래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힘.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6. 10. 30.

■ 북한에 퍼진 시장경제...소비·투자의 28% 추정(연합뉴스)

- 북한의 소비·투자 등 수요에서 시장경제가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일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 부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음.
- 최 부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내 비공식 경제의 확산 정도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한 통계가 부족하므로 불가피하게 강한 가정을 도입한 점이 이번 연구의 한계”라며 가정을 변경하면 구체적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함.

2016. 11. 4.

■ 북한 옥수수 가격 대폭 상승...주민 고통 가중(연합뉴스)

- 북한에서 옥수수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4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청진시 수남 장마당에서 입쌀(북한에서는 흰쌀을 의미함)은 우리 돈으로 4천3백원이고 강냉이(옥수수)는 kg당 우리 돈 1천6백원”이라며 “강냉이 가격은 지난해 가을보다 두 배나 올랐다”고 RFA에 전함.
- 이 소식통은 “회령시 장마당에서 지난해 11월 초 강냉이 가격은 kg당 내화(북한 돈) 8백원이었다”며 “강냉이와 함께 술 한 병 가격도 1천8백 원으로 경증 뛰었다”고 덧붙였다.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1. 1.

■ 中 북한산 석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 성은 산둥(연합뉴스)

-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꼽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올해 북한산

석탄(무연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지역은 산둥(山東)성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VOA는 중국 해관총서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둥성이 올해 들어 9월까지 북한산 석탄 약 2억8천만달러(약 3천2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고 밝힘.
- 한국·미국·일본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까지 차단하는 수준의 안보리 결의를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은 민생용 교역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 대북제재 여파로 중단된 북한식당 송도원·옥류관 폐업(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대표적인 북한식당인 송도원과 옥류관이 최근 폐업한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1일 “최근 단둥에 위치한 북한식당 가운데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보이는 압록강 변에 자리 잡은, 가장 유명한 송도원과 옥류관마저 매출 감소를 못 이겨 최근 폐업했다”고 밝힘.
- 랴오닝 성 다롄(大連)의 대북 소식통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한 손님을 받지 않던 북한식당들이 요즘에는 남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입 증가를 위해 한국인임을 알면서도 모른 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방송은 보도함.

2016. 11. 2.

■ 北, 몽골 광산에 노동력 수출 타진(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몽골 광산에 노동력을 수출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일 보도함.
- 몽골의 한 건설 관계자는 RF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몽골 측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몽골은 지난 2008년부터 북한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해왔으며, 2013년에는 5천 명에 달하기도 함.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경제불황으로 현재 몽골 내 북한 노동자는 1천여 명에 불과한 실정임.

■ 中지방도시, 北석탄에 있던 ‘퇴짜’...통관검사 강화한 듯(연합뉴스)

- 중국 지방정부가 최근 북한산 석탄에 대해 통관과정에서 잇따라 퇴짜를 놓은 사실이 드러남.
- 표면적으로 유해물질 함량이 문제된 것이지만 최근 북한산 석탄의 대(對)중 수출 금지를

놓고 미·중간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이 ‘통관검사’ 강화에 나선 것이란 관측을 낳음.

- 2일 지역매체인 제로만보(齊魯晚報)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시 산하 평라이(蓬萊)시는 최근 북한에서 수입한 무연탄에 대해 최근 5차례에 걸쳐 반송조치를 취함.

2016. 11. 3.

■ 北, 9월에 중국서 쌀 대거 수입…김정은 집권후 최대(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9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단위로는 가장 많은 양의 중국산 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일 보도함.
- 북한 농업 전문가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9월에 수입한 중국산 곡물은 총 1만8천477t에 달함.
- 이는 지난달 수입량 6천954t보다 약 2.7배,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158t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치임.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11. 3.

■ 北 수재민들, 추위에 완공되지 않은 주택 무단 입주(연합뉴스)

-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복구가 지지부진하면서 수재민들이 채 완공도 되지 않은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3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초겨울 추위와 결방살이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한 수재민들이 채 완공되지 않은 살림집에 막무가내로 입주해 이미 생활을 시작했다”고 RFA에 밝힘.
- 소식통은 “김정은이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인 10월 20일까지 수해지역 살림집 건설을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었다”면서 “살림집 건설을 한 달 내에 끝내라던 김정은의 지시가 헛물을 쵸고 말았다”고 설명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10. 30.

■ 북한서 미신 만연…돈 조각상·신수풀이 사진 나돌아(연합뉴스)

- 북한에서 각종 미신이 만연한 상황이 인민군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됨.
- 30일 연합뉴스가 북한 민주화운동조직인 ‘조선개혁개방위원회’로부터 입수한 ‘5월 집행위원들의 당생활평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인민군 내부 문건에는 “돈을 많이 벌려면 가정들에 돈 조각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미신적인 유언비어 현상들을 제때에 정치적으로 색출하여 여러 개의 조각상을 회수하고 망아시기(초기)에 짓밟개버리었다”고 나와 있음.
- 2011년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중앙기관 간부 출신 탈북자는 “내가 탈북할 때까지도 북한에서 점을 치는 행위는 매우 일상화한 현상이었다”며 “미신행위 근절을 위한 당국의 검열도 날이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였다”고 전함.

2016. 11. 2.

■ 北 지방서 특권계급 뜻하는 ‘1번동지’ 호칭 등장(연합뉴스)

- 북한의 지방에서 특권계급을 뜻하는 ‘1번 동지’라는 호칭이 등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이제는 도당 책임비서나 부서 책임자들까지 다 ‘1번 동지’로 통한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아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지방 하급 간부들이 자신의 상관이 최고라는 의미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함.
- 북한에서 ‘1호’나 ‘1번’은 ‘1호 행사’, ‘1호 도로’ 등 최고 지도자에게만 붙이는 수식어로 주민들에게 인식돼 왔음.

2016. 11. 3.

■ 북한 사람들, 사색에서는 정권 비판 한다(연합뉴스)

- 2중, 3중의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있고 정권을 비판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북한 사회지만, 매우 친하거나 가까운

가족들만 있는 자리에서는 북한 사람들도 정권을 비판하거나 그런 내용의 농담을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됨.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말을 들었다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 36명 중 35명이었음.
- CSIS는 “인터뷰와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시기나 구체적인 방식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응답자 선정이 통상적인 표본추출 기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응답을 끌어낸다는 점에 주력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었다고 덧붙임.

■ 나선특구 중국공장서 北업자들 물건 빼돌리기 성행(연합뉴스)

- 북한 나선경제특구에 투자해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 측 대방(무역업자)의 횡령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3일 보도함.
- 나선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의 한 기업인은 “나선에 공장을 세운 중국 기업들은 자본과 설비투자를 전담하고, 북한 측에서 인력과 공장 운영을 맡는 합작 형태”라면서 “북한 측 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물품을 빼돌릴 수 있는 구조”라고 RFA에 밝힘.
- 함경북도의 한 주민은 “과거 개성공단에서 일어났던 일이 나선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면서 “개성달리기와 나선달리기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다”라고 RFA에 전함.

2016. 11. 4.

■ 대북매체, 北 일부 가정서 노인들에 극단적 선택 요구(연합뉴스)

- 북한에서 자식들이 노부모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풍조가 생겼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4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들에서 부자간, 고부간 갈등이 심하다”면서 “일부 가정들이 노부모 시중에 약값이 많이 들고 장사도 할 수 없게 되자 ‘자폭정신’을 들먹이며 부모의 방에 ‘자폭정신’이라고 쓰인 죽자를 걸어놓고 있다”고 RFA에 전함.
-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RFA에 “자폭정신이란 북한에서 수령을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는 의미를 담은 용어”라며 “최근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자폭정신을 노부모에게 강요하는 풍조가 생겼다”고 설명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10. 31.

■ 빌 클린턴, 2009년 방북때 북미대화-6자회담 병행 제안(연합뉴스)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009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북미대화와 6자회담의 병행을 제안했음을 시사하는 문서가 공개됨.
- 미국 폭로전문매체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존 포데스타 힐러리 클린턴 선거대책본부장의 해킹된 이메일들 가운데 포함된 문서임.
- 문서를 보면 “미국과 북한의 공동의 미래를 믿는 사람으로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와 구축한 관계를 활용하기 위해 북미 양자 대화 추진과 6자회담 복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가능한지를 놓고 북한 지도부가 토론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써어 있음.
- 이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북미) 양자 대화를 추진하면서 6자회담을 살리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6자회담을 추진하면서 (북미) 양자대화를 소홀히 하면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함.

2016. 11. 1.

■ 美 해상기반 X-밴드레이더, 한달간 北 감시후 하와이 복귀(연합뉴스)

- 미국 해군이 탄도미사일 탐지용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Sea-Based X-Band Radar:SBX)를 한반도 인근 공해상으로 이동해 한달 간 임무를 수행한 뒤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됨.
-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일 “미국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가 모항인 하와이를 출항해 모처에서 한 달간 임무를 수행한 다음 지난달 말 하와이로 복귀했다”고 밝힘.
- 앞서 영국일간 ‘더 선’은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국을 향하는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하와이 진주만 기지에서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를 북한 해역 바깥에 배치했다고 보도함.

2016. 11. 2.

■ 美정보당국, 北 대선·이취임식 전후 DMZ 등 국지도발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나 차기 대통령 이취임식 등을 전후해 핵실험

- 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등을 포함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자들이 1일(현지시간) 주장함.
-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이날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 등 정보기관 당국자들을 만난 뒤 문화원에서 특과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함.
 - 원 의원은 “나는 북핵 위협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로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을 주장했으며 이 의원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함.

■ 北, 美블링컨 북핵 비판에 “오바마 패거리, 참견 말라”(연합뉴스)

- 북한은 2일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고위 인사의 대북 비판에 대해 “임기를 마치게 되는 오바마 패는 남의 집 일에 참견질은 그만두고 제 집안 정리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 중 북한의 핵 개발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의 병진로선(노선)의 승리적 전진에 기절초풍한 오바마 패의 마지막 울부짖음”이라고 강변함.
- 대변인은 블링컨 부장관의 발언이 “우리를 핵무장화어로 떠밀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 상태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벗어나 보기 위한 구역질 나는 변명”이라고도 비난함.

나. 북·중 관계

2016. 10. 30.

■ 中, 北리선의 홍콩계 두만강은행 폐쇄…대북편법송금 관여한듯(연합뉴스)

- 북한의 경제특구 라선(나선)에서 영업하던 홍콩계 '두만강은행'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30일 전함.
- 통신은 복수의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 은행의 중국인 은행장과 최근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 은행은 북한의 자금세탁에 관여했다는 정보가 있으며, 은행장은 중국 공안당국에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따른 중국 독자제재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지적함.

■ **북중, 완공후 미활용 국경다리 2개...개통 논의했을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 짓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통하지 않은 국경다리가 많아 최근 평양에서 열린 국경공동위원회 회의에서 개통을 위한 문제 해소방안을 토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 30일 북중접경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수천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국경선인 압록강에 건립한 뒤 미개통 중인 다리는 지린(吉林)성 단둥(丹東)의 신압록강대교, 지린성 지안(集安)의 지안~만포 대교로 확인됨.
- 현지 소식통은 “중국 지방정부와 북한이 경협 활성화를 위해 다리 건설에 나섰으나 내부사정으로 개통에 차질을 빚었다”며 “최근 국경공동위가 새 국경다리와 국경통과지점 건설 문제를 토의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의 해소방안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2016. 11. 2.

■ **中 한국행 유커 줄이고 북한관광 유도...접경 관광상품 개발(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저가 상품 규제 방침을 정하고 최근 자국 여행업계에 북한 관광상품 개발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짐.
- 2일 접경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판매하는 만나절 일정의 북한 관광상품처럼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북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연내 선보일 계획임.
- 접경지역의 한 소식통은 “중국 측이 드러내 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북중 접경에서 북한 관광산업 장려책은 한국 관광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견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2016. 11. 3.

■ **NHK “中, 유엔추가제재에 민생관련포함 신중입장 北에 전달”(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 북한 주민의 생활을 압박할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는 자국이 신중한 입장이라고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NHK가 2일 보도함.
- NHK는 중국과 북한관계에 밝은 외교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류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 고위관계자에게 중국의 이런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함.

- 중국 신화통신은 류 부부장 일행의 방북과 관련, 북·중 관계와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함.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과 류 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려 새 국경 다리와 국경통과지점 건설 문제가 토의됐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 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음.

■ 中, 北 나선특구에 전력 공급할 듯·송전탑 건설 한창(연합뉴스)

- 북·중 합작사업의 하나로 중국이 북한의 경제특구인 나선지구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미국 상업위성이 지난 3월 1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중국 훈춘(琿春)과 인접한 나선지구에 총 68개의 송전탑이 건설되고 있다고 밝힘.
- 멜빈 연구원은 또 “나선지구의 선봉화력발전소에서는 새 발전소를 짓거나 기존의 발전소를 보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건축공사가 한창”이라며 “이전의 발전소가 오랫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 북부지방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선봉발전소를 보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힘.

다. 북·일 관계

2016. 10. 31.

■ 아사히 “北日, 마카오서 접촉한 듯·다렌 접촉 한달만에”(연합뉴스)

- 북한·일본 당국자가 이달 8~10일 마카오나 홍콩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북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3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과 접촉한 일본 정부 인사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 등 3명과 일본 고위 관료 1명이며 장소는 마카오라고 소식통이 밝힘.
- 이들의 접촉 장소가 홍콩이라는 정보도 있으며 북한 측 인사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덧붙임.

라. 북·러 관계

2016. 11. 1.

■ 푸틴, 북한과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 지시…사범 공조 일환(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현지 법률 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대통령령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에 관한 정부 제안을 채택하라”고 지시함.
- 앞서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해 11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함.

■ 리, 불법 조업 단속관에 폭력 행사한 北선원 6명 구속수사 중(연합뉴스)

- 러시아 수사당국이 동해 상의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단속하는 국경수비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북한 선원 6명을 형사 입건하고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밝힘.
-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극동 지부 공보실은 이날 “10월 중순 발생한 북한 어선 단속 과정에서의 충돌 사건으로 6명의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이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범죄 행위를 한 6명의 북한 선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 선원들엔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공보실은 덧붙임.

2016. 11. 3.

■ 리 장관, 유엔 제재에도 대북 전력공급 사업 계속 추진(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는 2일(현지시간)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등이 지지한 (대북) 제재에 적응하기 위한 일정 기간이 있었다”며 “이러한 제재의 틀 내에서 가능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힘.
- 갈루슈카 장관의 발언은 나선 특구로의 전력 공급 사업을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리,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 北주민에 타격 줘선 안돼(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채택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이행 가능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타격을 입히지 않는 선의 제재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추가 대북 결의 채택 지연 이유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이같이 밝힘.

- 그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또 그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는 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핵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을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0. 29.

■ 유엔 1위원회, 핵결의안에 ‘北 5차핵실험 규탄’ 포함(연합뉴스)

-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VOA 방송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1위원회는 일본과 독일 등 64개국이 공동제안한 ‘핵무기 완전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에 따른 공동행동’ 결의안을 지난 27일(현지시간) 채택함.
- 결의안은 “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016. 10. 31.

■ 北, 연일 반기문 총장 ‘협담’…美와 극우보수 비위 맞춰(연합뉴스)

- 북한이 각종 선전 매체를 동원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연일 비난하고 있음.
-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오늘’은 31일 ‘반갑지 않은 꼴로 대통령 자리를 기웃거리 는 문둥이’라는 글에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문둥이와 같은 인물이 오늘 또다시 세간에 나타나 만 사람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그는 다름 아닌 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라고 비방함.
-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0일 “반기문은 일찍부터 미국에 대한 환상이 골수에 들어찬 친미분자이고 미국이 품을 들여 키운 앞잡이”라고 비난함.

2016. 11. 1.

■ **EU·일본,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제출(미국의소리)**

-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일본과 함께 새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 유럽연합과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음.
- 양측은 올해도 공동으로 결의안 초안을 준비했고, 지난해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함.

■ **北, 최순실 파문 터지자 연일 '반기문 때리기'(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파문으로 국내 정국이 혼란에 빠져든 상황에서 북한이 연일 여권의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음.
- 대외·대남 매체를 중심으로 한 북한 매체들은 최근 시흥 동안 반 총장을 실명 비난하는 기사를 매일같이 1~3건씩 내보내고 있음.
- 양무진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대남정세 판단에 따라 엉뚱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의 관여로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함.

2016. 11. 3.

■ **유엔총회 제3위원회, 15일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연합뉴스)**

-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오는 15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표결한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를 인용해 3일 보도함.
- VOA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고, 올해도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함.
- 결의안은 표결을 거쳐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 **메르켈,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이웃국 위협(연합뉴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지난 수년 동안 이웃 국가들을 위협해 오고 있다고 지적함.
- 메르켈 총리는 이날 오후 베를린 총리청사에서 제12회 서울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겸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평양의 지도부는 국제법을 무시한 채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함.

- 메르켈 총리는 이번 수상에 사의를 전하는 가운데 “유럽 통합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 독일과 이웃국가 및 이스라엘과의 화해와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에 대해 이번 상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독일과 유럽에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대신함.

■ **‘석탄’에 막힌 5차 북핵실험 제재...4차때의 ‘57일’ 초과 확실(연합뉴스)**

-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채택 논의가 북한산 석탄 교역 제한이라는 ‘고비’ 앞에서 방황하고 있음.
-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3일 현재까지 55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정권 자금줄에 타격이 될 북한산 석탄 수출 규제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까지의 소요 기간은 지난 1월 6일 4차 북핵실험 때의 57일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0. 30.

■ **갈루치, 현 상태라면 2020년 北핵무기 100개...북미대화 제언(연합뉴스)**

-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행 제재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국 정권이 북한과 교섭을 시작할 시점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힘.
- 갈루치 전 특사는 30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한미일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보다 북중 접경의 불안정화를 우려하는 이상 중국과의 연대를 축으로 하는 제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서 이런 견해를 표명함.
- 갈루치 전 특사는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와 함께 이달 21~22일 말레이시아에서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 등과의 북미 비공식 대화에 참석했으며 인터뷰는 이보다 앞선 이달 11일 이뤄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함.

2016. 11. 2.

■ **북한 1~3일 이내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연합뉴스)**

- 북한이 1~3일 이내에 ‘무수단’(북한명 화성-10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함.

- 폭스뉴스는 “정보분석 관련 업무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관리들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힘.
- 만약 북한이 실제로 발사에 나선다면 올해 들어 9번째로 이뤄지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됨.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0.31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내일 서울서 회동...북핵 협의(연합뉴스)	
	11.1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오늘 '북핵' 대응 협의(연합뉴스)	
		합참의장, 판 美전략무기 시찰...北도발 대응능력 증분(연합뉴스)	
		美 공군총장 한국 방문...北위협 대응 공군력 강화 논의(연합뉴스)	
	11.3	한미 해병대, 북한 피난민 수용훈련 첫 실시(연합뉴스)	
11.4		브룩스 사령관, 8~10개월 내 사드배치 완료...팜보다 클 것(연합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대선 이후에도 한반도정책 바뀌지 않을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0.29	한중일 통상장관,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하자(연합뉴스)	
	11.1		中관영매체 최순실 사태 1면 보도... "사드배치에 영향" 주장(연합뉴스)
		정부, '북핵·미사일 지원' 중소기업 홍상 독자제재 검토(연합뉴스)	
	11.2		중국 "한국 해경, 中어선에 무력 사용 안돼" 강력 비난(연합뉴스)
11.3		中관영언론, 韓해경의 중국 어선 발포는 광적인 행동(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0.30	주형환, 中·日과 양자 장관회담...통상협력 모색(연합뉴스)	
	10.31	한일, 내일 도쿄서 군사정보협정 실무 협의...4년5개월만에 재개(연합뉴스)	

			日정부, 최순실 파문 주시...한중일 정상회의는 예정대로(연합뉴스)
	11.1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의 재개...도쿄서 첫 실무협의 개최(연합뉴스)	
	11.3	외교부,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 일관되게 추진중(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0.29	블링컨 “중국, 북한 석탄제재 강화 논의할 의지 있어”(연합뉴스)	
	10.31	미·중,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 합의 어려울듯(연합뉴스)	
	11.1	美中 6자회담 수석대표, 어제 전격 회동...북핵 대응 논의(연합뉴스)	
		美 매체 “中 국영 석유기업 시추선, 北 EEZ내 포착”(연합뉴스)	
	11.2	美라이스케리, 중앙제츠와 뉴욕 회동...대북제재 담판 가능성(연합뉴스)	
		中, 美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대북관계 단절 않는다(연합뉴스)	
11.3	미국무부 “中, 北핵무기 도발 우려 미국 못지않다”(연합뉴스)		
11.4		아사히 “中, 대북제재결의 美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시도”(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1.2	美·日, 태평양 광 부근서 첫 합동상륙훈련...도서 탈환 상징(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0.29		러 전투기, 시리아서 美 전투기에 800m까지 근접비행(연합뉴스)
	11.4	美, 러시아 견제 위해 유럽에 육군 병력 6천여 명 파견(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0.23	‘영유권 분쟁’ 중·일...경제 분야 협력 강화한다(연합뉴스)	

	11.1	아베, 중국 견제 정상외교 박차...아웅산 수치, 일본 방문(연합뉴스)	
	11.2	中, 동중국해서 가스전 추가개발 정황...日 “매우 유감” 항의(연합뉴스)	
	11.2	日아사히, 한중일정상회의 무산위기...12월초 개최에 中묵묵부답(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1.1		러시아 상원의장, 쿠릴섬 2개 반환 약속 공동선언 유효(연합뉴스)
	11.3		러시아 상원의장, 北핵개발 막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해야(연합뉴스)
	11.4	러일 경협 협의 속도...푸틴 방일 앞두고 영토협상 땅고르기(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10. 31.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내일 서울서 회동…북핵 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달 1일 오전 서울에서 회동한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의 최근 ‘일본→한국→중국’ 순방을 수행했던 윤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김 본부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때 윤 특별대표와 상견례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회동은 윤 특별대표의 공식 취임 이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첫 공식 협의임.

2016. 11. 1.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오늘 ‘북핵’ 대응 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일 서울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함.
- 이번 회동은 윤 특별대표의 공식 취임 이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첫 공식 협의임.
- 두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임.

■ 합참의장, 괌 美전략무기 시찰…北도발 대응능력 충분(연합뉴스)

- 이순진 합참의장이 1일 태평양 괌의 미군기지를 방문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전략무기)들을 둘러봄.
- 합동참모본부는 “이순진 의장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오늘 괌에서 미 국방부, 전략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대표들과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미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고, 한미동맹 협력의 범위와

단계를 더 넓히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합 방어 태세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美 공군총장 한국 방문·北위협 대응 공군력 강화 논의(연합뉴스)**

- 데이비드 골드핀 미 공군참모총장(대장)이 1일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과 한미동맹의 공군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공군은 “정경두 총장이 오늘 계룡대 공군본부를 방문한 골드핀 총장을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우의를 다졌다”고 밝힘.
- 골드핀 총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처음임. 골드핀 총장은 테런스 오사너시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토머스 버거슨 주한 미 7공군사령관과 함께 공군본부를 찾았음.

2016. 11. 3.

■ **한미 해병대, 북한 피난민 수용훈련 첫 실시(연합뉴스)**

- 한국 해군과 해병대, 미국 해병대가 전시에 남쪽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 피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함.
- 해병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포항 일대에서 진행되는 ‘2016년 호국 합동상륙훈련’에서 북한 피난민 수용과 지원 훈련을 처음으로 했다고 3일 밝힘.
- 상륙군 지휘관 김삼식 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텍 캐리어 등 민간 자산을 군사작전에 적용 검증함으로써 한국형 단독 상륙작전의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함.

2016. 11. 4.

■ **브룩스 사령관, 8~10개월 내 사드배치 완료·괘보다 클 것(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 미군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
-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연설을 통해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힘.
- 브룩스 사령관은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 우리는 방어 능력을 강화

해야 하고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 미국에 대한 위협이 심대해질 경우 공세적으로 위협을 제거할 태세를 갖추야 한다”고 강조함.

■ **美하원 외교위원장, 대선 이후에도 한반도정책 바뀌지 않을 것(연합뉴스)**

- 미국 연방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반도) 정책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소속 원유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로이스 위원장이 “(한반도) 정책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함.
-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다고 해서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고 원 의원은 전함.

나. 한·중 관계

2016. 10. 29.

■ **한중일 통상장관,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하자(연합뉴스)**

- 한·중·일 3국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3국 통상장관들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이 회의는 2002년 ‘아세안+3’ 회의를 계기로 개최됐으며 올해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 세코우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함.

2016. 11. 1.

■ **中관영매체 최순실 사태 1면 보도…“사드배치에 영향” 주장(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최순실 사태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 중국 관영 관찰자망(觀察者網)은 31일 “최순실 사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사표를 제출하게됐다”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 국민이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루인(鹿音)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부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사드 배치 문제는 이전에 많은 한국 국민의 반발을 초래했다”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드를 철회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함.

■ 정부, ‘북핵·미사일 지원’ 중기업 홍상 독자제재 검토(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과의 불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 단둥홍상(鴻祥)실업발전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짐.
-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하에 추진 중인 대북 독자제재의 일환으로 홍상을 제재 대상 기업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그 시기와 함께 검토하고 있음. 정부가 홍상과 홍상 관계자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면 그들과 우리 국민간 외환거래, 금융거래 등이 금지되며, 홍상 및 홍상 관계자들의 국내 자산도 동결됨.
- 정부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논의에서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출에 제약을 가하는 고강도 제재에 동참할지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홍상에 대한 제재 여부와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2016. 11. 2.

■ 중국 “한국 해경, 中어선에 무력 사용 안돼” 강력 비난(연합뉴스)

- 중국은 한국 해양 경찰이 지난 1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자위권을 발동해 기관총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함.
- 그러나 중국은 지난달 발생한 중국 어선에 의한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에 대해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한국을 비난할 입장이 못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강한 저항에 한국이 처음으로 공용 화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힘.

2016. 11. 3.

■ 中관영언론, 韓해경의 중국 어선 발포는 광적인 행동(연합뉴스)

- 중국 정부에 이어 관영 언론까지 나서 한국 해양 경찰이 지난 1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자위권을 발동해 기관총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섬.
-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에 대해 ‘극우주의로 가득 찬 혐오스럽고 발작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3일 ‘한국 해경이 인도주의를 떨시킨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한국 해경의 발포가 국제 어업 관련법을 위반했다면서, 중국 어민들이 한국 영해로 들어가 조업하다 발생한 사건일 수 있지만 중국 정부와 사회는 한국 해경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6. 10. 30.

■ 주형환, 中·日和 양자 장관회담…통상협력 모색(연합뉴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주 장관은 29일 세코우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대신과 회담을 갖고 연내에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2016. 10. 31.

■ 한일, 내일 도쿄서 군사정보협정 실무협약…4년5개월만에 재개(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약을 다음 달 1일 도쿄에서 진행함.
- 국방부는 31일 “한일 양측이 내일 도쿄에서 GSOMIA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약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 측에서 외무성 북동아과장,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짐.

■ 日정부, 최순실 파문 주시…한중일 정상회의는 예정대로(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오는 12월 도쿄에서 열릴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잇단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자국에서 개최 예정인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힘.

- 31일 NHK 보도에 따르면 기사다 외무상은 전날 최순실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밝힌 뒤 한중일 정상회의를 예정대로 연내 개최할 수 있도록 의장국으로서 조율을 서두르겠다는 의사를 나타냄.

2016. 11. 1.

■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의 재개...도쿄서 첫 실무협의 개최(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당국이 1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함.
- 국방부는 “한일 양국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과장급 협의를 했다”며 “양측은 2012년 잠정 합의됐던 협정 문안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힘.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양측은 2012년에 서명을 준비했던 협정안을 바탕으로 국내법 정비나 이후 정세 변화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함.

2016. 11. 3.

■ 외교부,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 일관되게 추진중(연합뉴스)

- 외교부는 ‘최순실 사태’ 여파로 개최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대해 “관련 준비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3국 정상회의 무산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 정부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정부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와 관련한 일본 측 제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중국측도 금년중 정상회의 개최에 공감대를 갖고 일정 협의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임.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10. 29.

■ **블링컨 “중국, 북한 석탄제재 강화 논의할 의지 있어”(연합뉴스)**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대북제재의 구멍인 북한의 석탄 수출 제한을 논의할 의지가 중국에 있다고 강조함.
-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블링컨 부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허점을 메우려는 논의에 기꺼이 응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이 그동안 보여왔다고 말했다고 전함.
-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 대(對)중국 석탄 수출로 매년 10억 달러(1조1천억원)를 벌어들여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다는 점을 대북제재의 허점으로 지적함.

2016. 10. 31.

■ **미·중,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 합의 어려울듯(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대(對)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합의에 이르는 힘들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진하는 신규 대북 제재안은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짐.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5차 핵 실험과 관련해 중국이 대북 석탄수입 금지 의사가 없는 거냐는 질문에 “안보리에 통과할 결의는 북한 핵 실험에 대해 결의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유관 미사일 계획을 명확히 겨냥해야 하고 이런 제재라야 효과에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함.

2016. 11. 1.

■ **美中 6자회담 수석대표, 어제 전격 회동…북핵 대응 논의(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
- 이번 회동은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취임 후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첫 공식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한편,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미·중 전략 안전대화를 개최한 바 있음.

■ **美 매체 “中 국영 석유기업 시추선, 北 EEZ내 포착”(연합뉴스)**

- 중국 국영기업의 석유시추 장비가 북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지난 5월 이후 6개월째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함.
- 이 매체는 선박 정보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을 인용,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CNPC) 소유의 시추선인 ‘중요우하이(中油海)’ 17호가 지난 5월 북한 EEZ 내에 도착해 현재까지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북한은 1993년 원유탐사총국을 ‘원유공업부’로 승격시키고 외자 및 기술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음. 이후 각국의 석유 메이저와 유전개발 전문회사들이 참여했으나 발길을 돌려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음.

2016. 11. 2.

■ **美라이스-케리, 중앙제츠와 뉴욕 회동…대북제재 담판 가능성(연합뉴스)**

-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백악관이 밝힘.
- 네드 프라이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양국은 더 오래 가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양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했다”고 말함.
- 한편, 미국의 폭스 뉴스는 이날 북한이 1~3일 이내에 ‘무수단’(북한명 화성-10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정보분석 관련 업무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中, 美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대북관계 단절 않는다(연합뉴스)**

- 내년 1월 20일 취임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매, 보아뱀, 비둘기 세 마리의 동물 중 하나의 노선을 선택하거나, 각각의 주장 일부를 취해 조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음.
- 대북 정책론은 그동안 매과와 비둘기과로 대별됐으나,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를 세분해 보아뱀과를 하나 더 만들었음.
- 중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게 ‘목표는 비핵화, 전제조건은 평화와 안정, 수단은 대화’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전략을 택하면, 중국은 “단기적 돌파구 마련과 장기적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할 일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딜러리 교수는 주장했다. 역설적으로, “미국의 선도적인 대북 협상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건설적인 압력을 가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임.

- 딜러리 교수는 한국과 미국 언론에 자주 인용되는 중국의 전문가들 말고 “대부분의 중국 외교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중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은 대화와 협상만이 북한의 행태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장기적 진전의 희망은 북한 경제개혁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함.

2016. 11. 3.

■ 미국무부 “中, 北핵무기 도발 우려 미국 못지않다”(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위협이 된다는 점에 확실하게 합의하고 있다고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2일(현지시간) 밝힘.
- 커비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외신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미국)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놓고 중국과 강력하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강조함.
- 미국은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제재의 하나로 북한의 민생용 석탄수출까지 차단하는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차단하는 동시에 국제금융망에서 북한을 완전히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온적 반응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2016. 11. 4.

■ 아사히 “中, 대북제재결의 美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시도”(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이달 8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로 미루기 위해 관련국을 상대로 손쓰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북핵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북 제재결의 내용에 관해 미국과 사전 협의할 때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난색을 보임.
-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 문제로 오바마 정권과 더 협의를 반복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함.

나. 미·일 관계

2016. 11. 2.

■ **美·日, 태평양 괌 부근서 첫 합동상륙훈련…도서 탈환 상징(연합뉴스)**

- 미국 해군 해병대와 일본 육상 해상자위대 병력이 미국과 괌 인근에서 대규모 합동상륙 훈련에 돌입함.
- 미 태평양사령부는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괌과 티니안 섬 인근에서 미·일 연합훈련 (Keen Sword)의 하나로 해군과 해병대원을 주축으로 한 미군과 자위대 병력이 참가하는 합동상륙훈련을 처음 실시한다고 발표함.
- 특히 이번 상륙훈련에서는 도서 탈환을 상징한 훈련도 실시된다. 이는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남중국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다. 미·러 관계

2016. 10. 29.

■ **러 전투기, 시리아서 美 전투기에 800m까지 근접비행(연합뉴스)**

- 시리아 작전에 참여 중인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동부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에 800m 정도의 위험 거리까지 근접 비행을 했다고 미 공군 지휘관이 28일 밝힘.
- AFP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대(對)테러전에 참여하는 미 공군 사령관 제프 해리지언은 “지난 17일 시리아 상공에서 대규모 정찰기를 호위하던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전투기에 반 마일(약 800m) 거리까지 근접비행하며 사고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함.

2016. 11. 4.

■ **美, 러시아 견제 위해 유럽에 육군 병력 6천여 명 파견(연합뉴스)**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6천여 명가량의 육군 병력을 유럽에 파견하기로 함.
- 미 육군은 3일(현지시간)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 주둔 제4 보병사단 예하 제3 기갑 전투여단 전투팀 소속 4천여 명과 뉴욕주 포트 드럼의 제10 산악사단 예하 제10 전투항공여단 소속 1천750명의 병력을 올 겨울 유럽에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함.
- 미국을 주축으로 한 나토와 러시아는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시리아 내전 해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등으로 ‘신(新)냉전’ 상태로 돌입함.

라. 중·일 관계

2016. 10. 30.

■ ‘영유권 분쟁’ 중·일…경제 분야 협력 강화한다(연합뉴스)

-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빚는 중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음.
- 이는 양국이 정치와 경제 문제를 별개로 떼어놓아 외교적 대립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임.
- 30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와 별도로 중·일 양국 회동을 갖고 다양한 양국 무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2016. 11. 1.

■ 아베, 중국 견제 정상외교 박차…이웅산 수처, 일본 방문(연합뉴스)

- 미안마의 최고 실권자인 이웅산 수처 국가자문역 겸 외교장관이 1일 일본을 방문함.
-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그는 오는 5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을 하고 게이단련(經團連) 등 경제단체 대표들과도 만날 예정임.
- 수처 장관은 오는 2일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미안마에 대한 일본의 투자 촉진 및 경제지원 확대 등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됨.

■ 中, 동중국해에서 가스전 추가개발 정황…日 “매우 유감” 항의(연합뉴스)

- 중국이 동중국해의 중·일 경계선 부근에서 이동식 굴착선을 정박시키고 시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나섬.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중국해의 중·일 경계선의 중국측 해역에서 중국이 이동식 굴착선을 정박시키고 뭔가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즉시 항의했다”고 밝힘.
-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2일에도 동중국해의 양국 영해 경계선 부근에 중국이 설치한 16기의 가스전 가운데 2기에서 새롭게 불꽃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에 항의한 바 있음.

2016. 11. 2.

■ **디아사히, 한중일정상회의 무산위기...12월초 개최에 중묵묵부답(연합뉴스)**

- 올해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도쿄(東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한국과 중국 정부와 접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음.
- 신문은 복수의 한중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하순 한국과 중국 정부에 12월 3~4일 도쿄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함. 그러나 중국은 일본측의 제안 이후 한달 이상 지난 현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6. 11. 1.

■ **러시아 상원의장, 쿠릴섬 2개 반환 약속 공동선언 유효(연합뉴스)**

-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러·일 평화조약 체결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처리와 관련,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2개 섬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한 1956년 옛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1일 밝힘.
- 마트비엔코 의장의 이런 발언은 영토분쟁 중인 4개 섬 중 2개만 돌려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러시아의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됨.
- 대통령, 총리에 이어 러시아 권력 서열 3위인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힘. 2011년부터 상원의장을 맡고 있으며 12월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의 방일준비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일본을 방문함.

2016. 11. 3.

■ **러시아 상원의장, 北핵개발 막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해야(연합뉴스)**

- 일본을 방문 중인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마트비엔코 의장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중 원폭 피해

를 입은 일본 나가사키의 원폭 자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련해 이같이 밝힘.

- 그는 “이 문제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일본, 미국 등의 다른 나라와 일치한다”면서 “우리는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함.

2016. 11. 4.

■ **러일 경제 협의 속도…푸틴 방일 앞두고 영토협상 땅고르기(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협상 및 평화교섭 체결을 위한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협력 방안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음.
- 4일 니혼케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부 장관,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경제개발부 장관과 모스크바에서 잇따라 회담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 추진 방침을 재확인함.
- 일련의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12월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전에 양국의 경제 협력 우선 과제 30개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함.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1.2	'탈북 엄마들' 워싱턴서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목청 높여(연합뉴스)
	11.3	유엔 북 인권 결의안 초안 '해외노동자 착취' 강조(자유아시아방송)
	11.4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차기 의장국은 이탈리아(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1.3	미 입국 탈북 난민 총 204명(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10.29	국제적십자, 정치적 우려로 대북 수해지원 차질(연합뉴스)
	11.1	미 정부, NGO 대북 수해지원 문제 없어...관련지침 통보(미국의소리) 대북 수해복구 지원재개 단체 증가세(자유아시아방송)
		美민간구호단체, 의료지원·수해지방문차 방북 예정(연합뉴스)
	11.2	북한 3분기 하루 배급량 300g...올해 들어 최소(연합뉴스) 中정부, 홍수피해 北에 34억원 무상지원(연합뉴스)
	11.4	IFRC '네덜란드, 북한 수해 복구에 100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1. 2.

■ ‘탈북 임마들’ 워싱턴서 “중국의 강제복송 중단” 목청 높여(연합뉴스)

- 자유를 찾으려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의 북한인 강제복송 정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임. 탈북 과정에서 자신들이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배경에 중국의 강제복송이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임.
- 탈북여성단체 통일맘연합의 김정아 대표는 1일(현지시간) 미국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일방적으로 강제복송하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밝힘.
- 이어 김 대표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임신부가 임신 기간과 무관하게 북한 관리들에 의해 잔인한 방법으로 강제 낙태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반인도적 행위도 강제복송과 함께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함.

2016. 11. 3.

■ 유엔 북 인권 결의안 초안 ‘해외노동자 착취’ 강조(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과 일본이 지난 달 3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내용이 최근 공개되었음.
- 결의안은 고문과 성폭력, 공개처형, 그리고 불법 감금 등 지금도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함.
- 특히 초안은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같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함.

2016. 11. 4.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차기 의장국은 이탈리아(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지원하는 ‘1718 제재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의 차기 의장국으로 이탈리아가 선정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4일 보도함.
-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의장국을 맡아온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는 RFA에 “최근

- 차기 의장국으로 이탈리아가 결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밝힘.
- 유엔 안보리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의해 설립된 1718위원회는 90일마다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해왔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11. 3.

■ 미 입국 탈북 난민 총 204명(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가 3일 갱신한 미국 입국 탈북 난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세 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데 이어, 이날 한 명의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됨.
- 미국 정부가 지난달 1일 시작된 2017 회계연도에 네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임. 이들은 유타주, 아리조나주, 텍사스주 그리고 일리노이주 등에 정착함.
- 한편, 지금까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중부 켄터키주에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은 탈북자가 정착했고 이어 뉴욕주에 20명이 동지를 틀었음.

5. 대북지원

2016. 10. 29.

■ 국제적십자, 정치적 우려로 대북 수해지원 차질(연합뉴스)

- 북한 정권에 대한 정치적 우려가 대규모 홍수피해를 본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간부가 29일 밝힘.
- 수해 복구 지원차 북한 함경북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패트릭 풀러 IFRC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사회가 정치와 분리해 인도적 재난이란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구호단체와 유엔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제재와 맞물려 서방 주요 국가들의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16. 11. 1.

■ 미 정부, NGO 대북 수해지원 문제 없어...관련지침 통보(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원할 경우 대북 수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힘.
-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기구들이 대북 지원 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함.
-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한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도 6만9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힘.

■ 대북 수해복구 지원재개 단체 증가세(자유아시아방송)

- 호주의 민간단체인 호주성공회 해외원조협회는 자매 결연을 맺은 평안남도 지역의 탁아소와 함께 수해가 컸던 함경북도 지역 수재민에도 긴급구호 식량을 보냈다고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함.
- 이 단체의 존 디앤 대표는 자매결연을 맺은 북한 내부의 단체를 통해서 평안북도 향산군 내에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 그리고 수해 피해 지역에 밀가루를 전달했다고 설명함.
- 캐나다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퍼스트스텝스도 최근 대표단을 수해 피해지역으로 보내서 현장을 살펴본 동영상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를 촉구함.
-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은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했으며 국제아동기금과 국제적십자사도 북한의 큰물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세계식량계획(WFP)도 지난 주말 '국가보고서'를 내고 북한 수재민을 위한 국제 사회 모금을 호소함.

2016. 11. 2.

■ 미민간구호단체, 의료지원·수해지방문차 방북 예정(연합뉴스)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가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과 수해지방문차 방북을 위해 이달 초 방북한다

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대북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결핵과 B형 간염을 앓는 환자 치료와 수해지에 보낸 구호 물품 확인 등을 위해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소식지를 통해 밝힘.
- 이 단체는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본부를 둔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북한에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등 29개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북한 3분기 하루 배급량 300g…올해 들어 최소(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3분기(7~9월)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함.
-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는 올해 들어 최소로,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600g)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북한당국이 목표로 하는 양(573g)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함.
- WFP는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수해 지원에 720만달러(약 86억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함.

■ 中정부, 홍수피해 北에 34억원 무상지원(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대규모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2천만 위안(약 34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함.
-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2천만 위안의 긴급 인도지원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함.
- 중국이 제공하는 물자는 북한의 긴급 재난구조와 피해 복구 및 재건에 사용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덧붙임.

2016. 11. 4.

■ IFRC '네덜란드, 북한 수해 복구에 100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 국제적십자사(IFRC)는 지난주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대북 수해 복구 자금 1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힘.
- 패트릭 폴러 국제적십자사 대변인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과 관련해 스웨덴과 태국 등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밝힘.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국제적십자사의 수해 복구 사업에 4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 47만 달러를 지원함.

- 국제적십자사는 수재민 33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미화 1천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목표액의 25%밖에 모금되지 않았으며, 추가 지원 없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함.